Briefing

# 핵심이익의 충돌과 미중관계의 미래

2011년 5월 4일

**김양규**
**동아시아연구원**

## 왜 공식성명(Official Statement) 분석인가?

미중관계의 변화를 연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떤 자료를 토대로 분석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양국 정부 수뇌부의 비밀문건들을 모두 열람하는 것이 가장 신뢰할만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방안이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제한적으로 양국 핵심관료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 '정말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완전히 떨쳐내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자료는 양국 정부의 공식성명일 수 밖에 없다. 물론 공식성명에는 일정부분 혹은 상당부분 프로파간다가 포함될 수 밖에 없기는 하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천명한 정부의 공식입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정보의 편재화遍在化가 세계적으로 진행된 상황에서는 높은 비용을 치르게 하기 때문에, 공식성명은 향후 각국 행보의 밑그림을 제공하는 상당히 신뢰할만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어느 범위까지를 공식성명으로 인정할 것인가? 미국의 경우에는 상당히 공개적으로 자국의 입장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투명한 정치 문화가 자리잡고 있고, 대외정책에 관한 한 각 부처간 공식성명의 경우에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일관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부 공식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정부의 입장들을 공식성명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를 포함한 몇몇 주무 부처 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다소 폐쇄적인 사회주의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부 정례 브리핑 이외에 공식성명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많지 않다. 게다가 정례 브리핑의 경우에도 정부가 선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가 많아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본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사실상 공산당에 의해 운영되는 당-국가 체제(party-state system)인 점을 감안하여 공산당의 관영매체에서 발표하는 사설까지를 공식성명 범위에 포함하여 분석하기로 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2009년 미중정상회담 이후 1년, G20 서울회의 개최, 시진핑習近平 중국 차기 주석의 등장 등으로 의미가 있는 2010년 11월부터 실시하였다. 분석자의 언어적 한계로 인해 영문 자료만을 수집하였으며, 대신 중국측 공식성명의 경우 중국이 자체적으로 발표하는 영문 텍스트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U.S.-China Relations (UCR) Statement Factsheet 시리즈를 통해 매월 공개하고 있다. UCR Briefing은 UCR Statement Factsheet 자료를 분석하여 매 4개월 마다 발표될 예정이며, 이번 제1호 UCR Briefing 보고서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의 공식성명 내용을 다루고 있다. 다음 제2호 보고서는 2011년 3월부터 6월까지의 공식성명 자료를 분석할 예정이다.

© 2011 by the East Asia Institute

## 핵심이익과 세력전이

UCR 시리즈(UCR Statement Factsheet, UCR Briefing)는 미중의 공식성명을 매일 수집하고 이슈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경제위기 이후 미중간 힘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는 가정하에 시작된 본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세력전이 이론의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기존의 세력전이 이론은 '부상하는 세력이 지배국에 의해 유지되는 국제정치질서에 불만족을 느끼는 경우, 경쟁하는 양국의 힘이 균등(parity)해지는 지점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Kugler and Lemke, et al. 1996, 7-10; Chan 2007, 2)고 보고 '세력전이(power transition)'와 '전쟁 발발 시점(outbreak of major wars)'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세력전이가 반드시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며 평화적 전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을 규명하고자 노력한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조건은 세력전이 상황에서 양자가 '서로의 핵심이익을 얼마나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Kupchan 2001, 18-33; Zhu 2006, 23) 그렇다면 '핵심이익, 즉 상대방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영역을 서로가 얼마나 존중해 주느냐?'에 따라서 서로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고, 이러한 인식이 한 번 형성되면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의 논리(Pierson 2000, 251-267)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 평화적 전이 또는 전쟁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핵심이익'의 영역을 파악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양국 공식성명을 이슈별로 분류하여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 미국과 중국의 핵심이익

공식성명에서 나타난 미중간 현안에 관한 입장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이전에 보다 큰 틀에서 미중이 대외적으로 밝히고 있는 각국의 핵심이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파악함에 있어서 미국의 경우는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가 2010년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문건(The White House 2010)이 중요하고, 중국의 경우에는 2009년 미중 '전략경제대화'(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에서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이 밝힌 '핵심이익'(core interest) 발언(中国新闻社 2009/07/29; U.S. Department of State 2009)이 중요하다.

먼저 오바마 행정부의 2010년 〈국가안보전략〉을 살펴보면, 미국은 국가안보전략의 우선순위를 '안보'(security), '번영'(prosperity), '가치'(value), '국제질서'(international order)의 4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밝히고 있다. '안보'의 영역에서는 비확산 및 핵안보, 증오·폭력 네트워크와의 전쟁, 그리고 이라크 및 중동의 안정을 강조한다. '번영'의 영역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미국 리더십 제고의 근간이 되는 경제력의 회복과 세계 번영을 위한 균형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미국의 중요한 이익으로 상정하고 있다. '가치'의 영역에서는 인권과 민주주의와 같은 보편 가치의 수호가 미국의 근본적인 이익에 기여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정의로운 평화'(just peace)와 이를 위한 국제규범의 강화가 미국의 이익임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질서'의 영역에서는 기후변화나 전염병의 확산과 같이 이 시대가 직면한 세계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의 영역임을 주장한다.

다음으로 중국 다이빙궈 국무위원의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미중 양자관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서로 각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중국의 핵심이익을 3가지로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중국의 '기본 국가체제'(basic systems)와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보존, 둘째 '주권 및 영토보전'(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셋째 중국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economic and social sustained development)이 바로 그것이다. 최근 연구(Swaine 2011)에 따르면,

© 2011 by the East Asia Institute

중국 정부가 3가지 핵심이익 가운데 특히 두 번째 핵심이익인 주권과 영토보전 문제를 가장 강조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만,' '티베트,' '신장지구'를 어떠한 상황에도 양보할 수 없는, 물리력의 사용까지 불사하고 지켜내야 할 중국의 핵심이익으로 명확하게 언급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롭게도 미국과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정의하는 방식은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첫째, 미국은 자국의 핵심이익을 정의함에 있어서 명확한 순위를 제시하지 않는 것에 반해 중국은 명확한 우선 순위, 그 중에 특히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이익'의 영역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둘째, 미국은 명확한 우선순위를 제시하지 않는 대신에, 각각의 이익이 서로 '불가분하게 얽혀있어'(inextricably linked) 하나의 이익을 따로 추구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한 영역에서의 성공은 다른 모든 영역에서의 성공에 토대가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반면 중국은 분절적으로 핵심이익을 하나씩 제시하고 있으며, 이익들 사이의 연결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셋째, 결정적으로 미국은 '네트워크,' '공동가치,' '국제규범,' '글로벌 질서' 등의 언어를 사용하며 자국의 이익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비해, 중국은 '영토보전' 및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자국의 핵심이익을 밝히고 있다.

요컨대, 미국의 핵심이익 담론은 다분히 복합 네트워크(complex network) 인식을 기초로 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담론은 '국가건설'(nation building) 또는 '부국강병' 모델을 그 바탕에 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양국은 같은 2010년대를 살고 있지만 발전경로상 다른 시대를 살고 있고, 이 때문에 핵심이익을 정의함에 있어서 서로 같은 단어를 사용할지라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각각 다를 수 밖에 없다. 동상이몽同床異夢을 피하기 어렵고, 구동존이求同存異가 한계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2010년 11월 ~ 2011년 2월 미중간 핵심이슈

[표 1]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발생한 주요현안들과 이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주요현안들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양국이 모두 세계 평화·안정·발전을 위해 '긍정적, 협력적, 포괄적'(positive, cooperative, and comprehensive) 미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동'에 방점을 찍는 미국과 '존이'에 방점을 찍는 중국이 대다수의 현안에서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양국 간 근본적인 대립이 '인권'이나 '대만, 티베트, 신장문제'와 같이 양국이 서로 핵심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민주주의'나 '자유'와 같은 국제사회 규범을 수호하는 것이 미국의 핵심이익에 속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인류 보편의 권리'를 위한 것임을 계속하여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중국의 부상이 '평화적인 부상'이 아니라 '공세적인 의도'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주권'과 '영토보전'이 '양보할 수 없는 핵심이익'이라고 수 차례 공식적으로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중국의 부상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인식할 수 있다.

요컨대 미국과 중국은 서로 여러 경로를 통하여 자국의 핵심이익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현안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반복적으로 서로의 핵심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2010년 12월까지 극심하게 나타났고, 올해 들어서는 지난 1월 미중정상회담을 통해 위안화 절상 문제, 북한 문제, 대만문제 등에 있어 상당 부분 입장 차이를 좁히는데 성공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미중관계를 단순히 낙관하기는 어렵다. 인권문제를 두고 양국이 여전히 한

© 2011 by the East Asia Institute

치 양보 없는 대립을 지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문제에 있어 '진정성'(seriousness)을 보이는 북한의 구체적 조치를 6자회담 재개의 선행요건으로 내세우는 것에 대한 중국의 반대, 대만문제를 두고 '하나의 중국'(one-China policy) 정책을 지지하지만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을 무시할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 등에서 보듯 일정부분 의견 조정에 성공한 이슈영역에서조차 양국 간의 근본적 견해 차이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표 1] 주요현안들에 대한 미중의 입장

| No. | 이슈 | 미국입장 | 중국입장 | 비고 |
|---|---|---|---|---|
| 1 | 미중관계 발전방향 | [갈등]<br>1. 미중관계는 아태지역 안보 · 경제 · 사회 네트워크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어야 함<br>2. 역사적으로 인류 보편의 가치를 보호할 때 조화로운 사회가 구축되고, 성공적인 발전이 가능했음<br>3. 양국의 차이에 주목하기 보다 공동의 가치를 강조해야 함 | [갈등]<br>1. '우방'과 '적'이라는 냉전적 이분법을 버려야 함<br>2. 서로의 발전경로 및 핵심이익(주권 · 영토보전)을 존중<br>3. 상호이해, '구동존이'의 정신으로 교류협력을 증진해야 함<br>4. 2010년 양국 관계 악화는 미국의 책임<br>5. 미국이 중국에 대해 '파트너'라는 단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임 | 갈등/협력 공존 |
| | | [협력]<br>1. 중국의 평화로운 부상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며,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확대된 역할을 환영함<br>2. 글로벌 세계 문제 해결을 위해 미중은 특별한 책임을 공유함<br>3. 긍정적·협력적·포괄적 미중관계 추구<br>4. 상호신뢰 구축이 필요 | [협력]<br>1. 미국은 중국 개혁 · 발전의 중요파트너임<br>2. 미중협력은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 중요함<br>3. 상호 전략적 신뢰를 구축해야 함<br>4. 중국 국내정치의 취약성이 미국에게 공격할 빌미를 주고 있으므로 중국의 국내정치 발전이 필요함 | |
| 2 | 경제협력 (위안화 절상, 기축통화, 무역불균형 문제) | [갈등]<br>1. 세계경제의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위안화 절상 절실하며 중국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안화는 저평가되어 있음<br>2. 환율은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중국이 인위적으로 외환 흐름을 통제함으로 인해 타국 통화들이 절상압박을 받고 있음<br>3. 중국은 국내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철폐하고 세계경제 발전과 번영에 이바지해야 함<br>4. 미국의 요구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이익에 부합 | [갈등]<br>1. 미국의 2차 양적완화 조치는 미국의 문제를 다른 나라의 부담으로 넘기는 것<br>2. 미국 경제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의 근원이므로 달러 기축 통화 문제를 포함하여 세계경제체제 민주화를 이룩해야 함<br>3. 미중 무역불균형은 국제산업분업구조와 미국의 첨단기술제품 수출 규제 때문이지 환율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님<br>4. 중국보다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반덤핑, 상계관세, 지적재산권 문제 등)이 더욱 심각한 문제 야기 | 갈등/협력 공존 |
| | | [협력]<br>1. 근본적으로 미국의 경제 회복은 미국 산업 국제경쟁력 회복에 달려있음<br>2. 저축, 투자, 혁신, 교육을 통해 미국 국가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것<br>3. 중국의 내수시장 강화,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를 환영하며 미중간 합의한 사항들을 지켜나가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 | [협력]<br>1. 중국은 지속적으로 환율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며 내수시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br>2. 위안화는 아직 국제통화역할을 하기 어려우며 이는 보다 장기적 추진과제임<br>3. 미국은 위기 이후에도 빠르게 문제에 적응하는 면모를 보여주었으며, 중국도 단순히 경제력 규모에서 미국을 따라잡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 효율적으로 근대경제 모델을 완성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 | |

© 2011 by the East Asia Institute

| | | | | |
|---|---|---|---|---|
| 3 | 미중 군사안보 협력 | [갈등]<br>1. 군사력 증강은 주권 국가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그 의도에 대한 투명성이 반드시 필요함<br>2.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중국군의 현대화가 아닌 중국 군의 능력 및 의도에 대한 전략적 불투명성임<br>3.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미중전략 대화를 통한 군비통제 논의가 필요함<br>4. 중국의 군사력 강화가 주로 미국에 대한 '접근차단,' '지역거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갈등]<br>1. 중국은 화평발전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방어적인 전략으로 누구에게도 위협이 될 수 없음<br>2.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수용하지 못하는 듯함. 중국은 자국의 기본적 권익을 지켜나갈 것임<br>3. 중국은 미국 군사력에 비해 기술 및 운용능력 면에서 적어도 한 세대 이상의 격차가 있음. 경제력 강화에 따른 군사력 강화는 자연스러운 현상<br>4. 미국은 중국을 겨냥하고 일본 군사력의 대외투사 확대를 지원하고 동남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 갈등/협력 공존 |
| | | [협력]<br>중국이 군 및 민간 리더십 수준에서 미중 군사안보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강한 듯. 미국은 이를 환영하며 앞으로 관계 개선해 나갈 것 | [협력]<br>미중 군사교류를 통해 상호신뢰 증진을 이룩할 수 있을 것 | |
| 4 | 인권문제<br>(노벨 평화상, 티베트·신장, 중동·북아프리카 소요) | [갈등]<br>1.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류사오보의 요구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것임. 중국 정부는 그를 포함한 정치범들을 즉각 석방해야 함<br>2. 중국 정부는 티베트 및 신장지구의 소수민족들의 권익 보호해야 함<br>3. 중국과의 관계 발전은 중요하지만 인권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할 것이며 이는 미국 정체성의 문제임<br>4. 중국은 종교의 자유, 시민사회 권익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함<br>5. 북경 시위 현장에서 서구 취재진들을 폭행하고 감금한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함. 중국 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br>6. 중국의 인터넷 검열은 단기적으로 가능할 뿐 장기적으로 반드시 문제가 될 것<br>7. 미국은 중동 문제에 직접 관여할 생각이 없으며 중동 각국 정부와 시민들에 의해 결정될 문제임<br>8. 미국은 중동 권위주의 정부들이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민주적인 정치개혁을 이룩하길 바람 | [갈등]<br>1. 중국은 법에 따라 범법자를 처벌할 권리가 있으며 중국의 사법 자주권에 대한 침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br>2. 서구의 기준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발전 노력을 무시하고 저지하는 것임. 중국은 중국의 가치를 지켜나갈 것<br>3. 중국 부상 여건을 악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중국은 절대 외부 압력에 흔들려서는 안될 것<br>4. 인권문제에 관한 미중간의 교류는 상호존중, 내정간섭 금지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함<br>5. 인터넷 자유는 점진적으로 개선할 문제<br>6. 아프리카 국가들은 스스로 발전경로를 선택할 권리가 있음<br>7. 이란과 바레인에 대한 미국의 이중적인 태도 비판. '보편가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구하는 것임<br>8. '보편가치,' '민주주의,' '자유'를 통해 미국의 전략적 이득을 달성하려는 미국의 중동전략 때문에 중동에서 정치적인 소요가 일어나고 있음 | 갈등 |
| 5 | 아태지역문제 | [갈등]<br>1.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관여정책은 지역안정에 기여하므로 지역, 미국, 심지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함<br>2.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br>3. 미국의 관여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중국 영향력의 상대적 축소로 이어지지도 않을 것 | [갈등]<br>1. 조어도 문제, 남중국해 문제에 미국이 관여할 명분이 없음<br>2.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이익 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을 분열시킴에 따라 아시아의 이익을 저해함<br>3.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 | 갈등 우세 |
| | | [협력]<br>인도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 [협력]<br>인도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 |

© 2011 by the East Asia Institute

| | | | | |
|---|---|---|---|---|
| 6 | 북한문제 | [갈등]<br>1.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중국이 연평도 및 북한 핵문제에 관해 북한에게 충분한 레버리지를 행사해야 함<br>2.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적 조치이며 이는 한국 정부의 법적 권리임<br>3. 북한이 진정성 있는 구체적 행동 의무(도발중지, 지역 내 긴장완화, 한국정부와의 관계개선, 2005년 공동성명에 따라 비핵화 의무 준행, 유엔안보리 결의안 준수)를 다하기 전에 6자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을 것임)<br>4. 미중 협력의 최종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가 되어야 함<br>5. 북한은 리더십 승계과정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도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음 | [갈등]<br>1. 중국은 남한과 북한 어느 편도 들지 않을 것이며 양측 모두에게 냉정하고 차분한 태도를 촉구함<br>2. 한미연합훈련으로는 북한을 억지할 수 없음. 특히 미 항공모함의 참여는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가 아닌, 미국의 영향력 유지를 위한 것으로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뿐임<br>3. 한반도 긴장 완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따라서 6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함. 관련 당사국들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함<br>4. 지역내 평화 안정이라는 전체이익이 최우선시 되어야 함<br>5. 북한문제는 이명박 정부 강경정책의 실패에서 기인함 | 갈등에서 협력으로 |
| | | [협력]<br>1. 한반도 평화안정은 미중의 공동이익<br>2. 남북한 관계개선과 건설적이고 진정성있는 대화가 문제 해결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임<br>3. 2005년 9·19공동성명의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 마련이 필요함<br>4. 6자회담 재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의 이행을 촉구함 | [협력]<br>1. 평화, 안정, 비핵화가 미중의 공동이익<br>2. 남북 당사자 간의 관계개선이 중요하며 진실되고 건설적인 대화를 개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절차임<br>3.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br>4. 6자회담 재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의 이행을 촉구함 | |
| 7 | 대만문제 | [갈등]<br>'대만관계법'은 법이기 때문에 법이 요구하는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 [갈등]<br>1. 대만문제는 중국의 핵심이익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임<br>2. 미국이 중국 주변 국가들에 대한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지원하며,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중국을 미국의 '전략적 적국'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게 함 | 갈등 조정중 |
| | | [협력]<br>1.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함<br>2. 평화로운 양안관계 발전을 지지 | [협력]<br>미국이 앞으로도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해 주기를 희망함 | |

## 결론 및 향후 전망

2010년 한 해 동안 지속된 미중간의 갈등과 반목은 2011년 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정부분 정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양국 모두 관계 개선의 의지가 강한 것을 서로 확인한 만큼 중단기적으로 양국 관계가 협력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구체적인 현안을 자세히 살

© 2011 by the East Asia Institute

펴보면 알 수 있듯이, 경제 문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현안에서 양국은 여전히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고, 특히 양국이 강조하는 핵심이익에 속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미중관계가 협력적인 국면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기는 힘들다. 대만문제나 티베트·신장지구와 관련된 현안 문제들이 다시 불거질 경우 미중관계가 급속히 냉각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이다.

서로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서로의 핵심이익을 존중하고 싶으면서도 의도치 않게 이를 침해하게 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 각각 다른 시대적 국제정치의 조직원리로 자국의 핵심이익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아무리 '보편'을 강조해도, 중국의 입장에서 그것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핑계'일 뿐이며, 중국이 아무리 '국내문제'라고 강조해도, 미국의 입장에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중국의 '공세'인 것이다. 이처럼 다른 시대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입장차이는 한 쪽이 다른 한 쪽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배워 사용하기 전에는 해결되기 어렵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더 발달된 '표준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자신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반대로 중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표준'에 동의할 수 없고, 더욱이 계속해서 부상에 성공하여 미국 보다 앞선 '부국강병'을 이룩하면 자신의 언어가 표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미중간의 입장차이가 근본적으로 조정되기는 어렵다. 중단기적으로 입장차가 분명한 현안들에 대해 의도적으로 언급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관계 개선을 이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핵심이익을 둘러싼 양국의 입장차이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면, 상호 전략적 불신이 커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문제들에도 더욱 예민한 반응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무력충돌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분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중정상회담 이후 표면적으로 미중협력이 강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해서 미중관계의 미래를 지나치게 낙관해서는 안되며, 보다 주의 깊게 현안들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면밀히 추적해 나감으로써 한국의 외교 전략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 2011 by the East Asia Institute

# 참고문헌

Chan, Steve. 2007. *China, the U.S., and the Power-Transition Theory: A Critique*. New York, NY: Routledge.

Kugler, Jacek and Lemke, Douglas et al. 1996. *Paritiy and War: Evaluations and Extensions of The War Ledger*.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Kupchan, Charles. 2001. "Benign States and Peaceful Transition" in Charles Kupchan et al., *Power in Transition: The Peaceful Change of International Order*. New York: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Pierson, Paul. "Increasing Returns, Path Dependence, and the Study of Politic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4, No. 2 (Jun., 2000).

Swaine, Michael D. 2011. "China's Assertive Behavior—Part One: On 'Core Interests.'" China Leadership Monitor 34. February 22.

The White House. 2010. *National Security Strategy*. May.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rss_viewer/national_security_strategy.pdf (검색일: 2011. 4. 11).

U.S. Department of State. 2009. "Closing Remarks for 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July 28. http://www.state.gov/secretary/rm/2009a/july/126599.htm (검색일: 2011. 4. 11).

Zhu, Zhiqun. 2006. *US-China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Power Transition and Peace*. London: Routledge.

中国新闻社. 2009. "首轮中美经济对话:除上月球外主要问题均已谈及." 7월 29일. http://www.chinanews.com.cn/gn/news/2009/07-29/1794984.shtml.

© 2011 by the East Asia Institute

##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 동아시아연구원(EAI)은 미국 맥아더재단(MacArthur Foundation)의 '아시아안보이니셔티브' (Asia Security Initiative) 프로그램 핵심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안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위해 2009년 1월 아시아안보연구센터(소장: 전재성 서울대)를 설립하였습니다.

- 본 연구 보고서는 아시아안보연구센터의 연구 결과물로서 정책결정 및 학술연구, 각종 교육사업에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인용할 시에는 출처와 저자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AI는 정책 이슈에 관하여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본 보고서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 보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십시오.
김하정 아시아안보연구센터 선임연구원 Tel. 02 2277 1683 (내선 107) hjkim@eai.or.kr
김양규 아시아안보연구센터 연구원 Tel. 02 2277 1683 (내선 108) ygkim@eai.or.kr

© 2011 by the East Asia Institute